

총선 1년 앞...정계개편·선거제 개편 소용돌이 속으로

새해 정치 기상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으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역학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민주당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극복이 지상과제 한국당 보수 통합이나 분당이나 2월 전당대회 분수령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사활

선거제도)도 '정치권 빅뱅'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여권 위기 극복하나=민주당은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당지지율 역시 다른 야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한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돌출 언행과 리더십도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꼽히고 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외부 인사들이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 반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세력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른바 '친박 신당' 창당 시나리오도 그중 하나다. <중소정당 미래=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그 방향으로 선거제가 개혁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바른정당 출신 인사가 각자도생을 할 수 있다. 정치권에 서는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당 입당을 시도하고,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다. 평화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과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았던 손금주·이영호 의원은 민주당행을 택했다.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손금주 의원 민주당 입당 선언...평화당 '격양'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정계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를 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달 28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지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미려하나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는 했지만, 당장 입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손 의원의 지역구인 나주·화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신정훈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손 의원의 입당을 결정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그동안 손 의원의 영입에 공을 들였던 민주평화당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권과의 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손 의원은 호남경쟁 구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호남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당의 맥은 평화당이 있고 있다"며 "두 사람이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의원의 입당 선언이 민주평화당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김경진 의원 등의 연쇄 탈당과 민주당 입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재결합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확고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정치적 현실을 보면 각자도생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간인 사찰" vs "범법자 농간"

국회 운영위 여야 혈투...결정적 한방 없이 끝나

여야는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새 지속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을 부른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겨 기해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0시 46분 마침표를 찍었다. 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 없는 회의에서 정면충돌 했지만 보수야당의 승리로

간주할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 수석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소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인이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우윤근 주러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애초 사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고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결국 차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은 조 수석에게 우 대사 의혹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단호하고 차분하게...임종석·조국 야당 집중포화 선방

각종 의혹 제기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난해 31일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시종 단호한 태도로 차분하게 답변에 나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내공을 보였다. 이날 임 실장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하는 한편 조국 민정수석의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국회 출석 전 기자들에게 "운영위를 통해 된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구분되기를 기대한다.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주장

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특감반의 공직자 휴대전화 압수 문제를 놓고 조 수석을 몰아세우자 그는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키워드'로 (휴대전화 자료를 추출)한다든지, (당사자가) 입회한다든지 본래 목적 외에 오·남용되지 않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유감 표명을 거론하자 임 실장은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를 보이기도 했다. 조 수석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밀리지 않았다. 조 수석은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정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회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요약했다. 특히, 조 수석은 "단언컨대"라는 수식어도 써가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트세컨드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